

기고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광주 민생토론회가 지난 6일 광역 시·도 중 가장 늦은 28번째로 열렸다.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 개최가 무산되면서 무려 6개월 만이다. 광주시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독 광주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해본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묵도하고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중앙 정부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광주시도 문제가 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3월 14일 전남과 공동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전남 단독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치르면서 두 광역단체를 한 곳에 모아 공동개최한 사실이 없었던지라도 강원도의 사례까지 들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유에서였다. 강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다만 지방정부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대

대통령 광주 민생토론회 실망스럽다

립각을 세워서 이득 될 게 무엇인지 아쉬움은 남는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광주시가 건의한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맹탕 토론회’, ‘말뿐인 토론회’란 우려와 뒷말까지 나온다. 반면 타 시·도 민생토론회는 광주와 비교해 볼 때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난 2월 11번째로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각종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듯 광주에서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발언과는 달리 무게감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어감에도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번 민생토론회에 대해 지역 언론과 일각에서 많은 우려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겨우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토론회 중 윤 대통령은 광주 복합 쇼핑물 사업과 관련한 교통 문제에 대해, BRT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도시철도 건립’에 대해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 시장이 복합 쇼핑물 사업과 관련해 지하철 문제를 거론할 땐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의아해했다고 한다. 지역 현안들에 대해 광주시와 정부가 서로 사전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의 억울한 부분도 읽힌다. 대표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그렇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소임을 마쳤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견이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 주재 행사로 국도의 철통 보안 속에 추진돼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광주시가 정부와 사전 조율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누락하거나 방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오히려 민감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또는 정부 측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대통령의 평소 말과 생각처럼 지역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이라는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고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동안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대통령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 민생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광주시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성을 기대한다.

기고



정영수 경영학박사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윤희없는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이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승세 흐름에서 주택구매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하며 서둘러 시장에 뛰어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의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가 조금은 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예단은 아직 이른 상황이고, 미분양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천387가구로, 전월보다 8.0% 늘었다. 2020년 10월(1만6천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천187가구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미분양 물량은 2천522가구로 전월(1천627가구)

한국 부동산시장 문제점과 양극화 대응방안

보다 53.8%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 대출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지방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으로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7월 초에서 9월 초로 돌연 연기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였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자, 태도를 바꿔 강한 시장 개입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9월 대출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예고하면서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대출에 고삐를 죄면 안 그래도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은 2000년 2억382만원에서 현재 12억9천490만원으로 11억원 가까이 올랐지만, 지방은 6천551만원에서 2억6천557만원으로 2억원 올랐다. 올해 하반기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방은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의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종 경제정책에서 정부, 여당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서는 대통령실

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폐지는 물론 완화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잇박자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지난달 윤석열정부에서 발표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개입이 아닌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기고 일관성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저성장장과 규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원배분의 순위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의 서울-수도권 위주의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업이나 산업단지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연령·직업별, 성별 통계를 기반한 주거단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에 맞춰 교육환경과 산업, 문화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세세 혜택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연휴는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이지만, 관심 부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화재 초기에 큰 힘을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부모님 댁에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307건으로, 35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5

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셈이다. 재산피해는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지만, 2017년 2월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인 관계로 설치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집은 안전한 거야’라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택 거주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만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돼 전기배선이 따로 없고 쉽게 설치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재용·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실질 지방분권·균형발전 촉구한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한 2024 정책 콘퍼런스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로 의미를 지녔다. 미국 전미주지사 협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시·도 지사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실현할 비전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기획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와 미래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도시 광주’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국가 질병이라고 진단한 강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오는 메커니즘 구축의 당위성을 들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

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구 위기가 현실화됐다. 지방소멸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재정 지원을 늘렸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라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요원한 현실이다. 광주시, 전남도는 각기 특성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해답은 간단하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지자체의 역량을 믿고 키워야 한다.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져야 한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공항 논의 속도내야 하는데 광주·전남 갈등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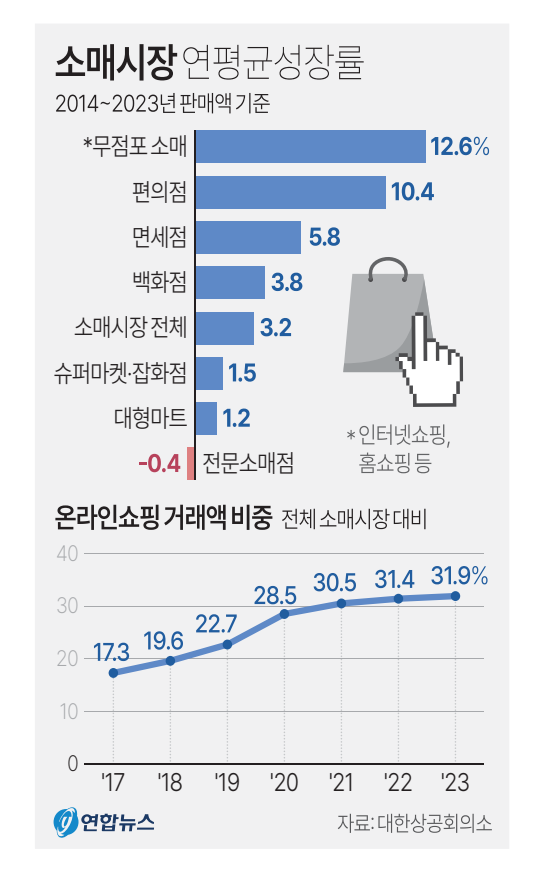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민의 피로감도 더하고 있다. 전남도는 연이틀 강기정 시장을 직격했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기피 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하는 무안군에 보파리를 먼저 갖고 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남도가 보파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린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전남에는 무안 실적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의문을 던졌다. 강 시장은 광산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도 합흥차사’라고 언급한 것에 발끈했다. 강 시장은 “연말까지 되면 되는데, 안되면 안되는 대로 끝내겠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전남도도 이야기해보면 뜻밖이지근하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책임론까지 꺼냈다. 김 지사는 “2025년 상반기까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민간공항을 즉시 무

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강 시장과 미묘한 입장 차도 보이고 있다. 공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체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 회담이 추석 전 다시 열릴것이란 기대도 멀어지고 있다. 한 치의 의견도 좁혀지지 않는 만큼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추석 직후로 전남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간담회 역시 성과가 있을 지 회의적이다.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전남권 국회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또 불투명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 등 국회가 나시고,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답각을 세우는 것까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지 못하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골몰하고 있다. 시도민들도 이전 그러려니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광주시, 전남도는 광주 공항의 무안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 굳건한 신뢰 위에 무안군을 움직이도록 합심해야 할 때임을 주지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쪼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궤마’의 자세를 재차 당부한다.

그래픽 뉴스

소매시장 연평균 3.2% ↑ ...온라인쇼핑 성장속도, 대형마트 10배

최근 10년새 국내 소매시장 규모가 30% 넘게 성장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등의 성장속도가 대형마트의 10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2023년 소매시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500조5천억원으로 2014년(382조3천억원)에 비해 33.3% 증가했다. 매년 2~4%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 온라인쇼핑과 TV 홈쇼핑 등 무점포소매(12.6%)와 편의점(10.4%)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업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무점포소매의 점유율이 2014년 11.8%에서 2023년 25.7%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편의점(3.3%→6.1%)과 면세점(2.2%→2.7%)도 시장 영역이 10년 전에 비해 커졌다. 반면 전문소매점(50.8%→36.9%)과 대형마트(8.7%→7.2%), 슈퍼마켓·잡화점(15.6%→13.4%) 등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축소됐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한 비중(서비스 거래액 제외)은 31.9%로, 2017년(17.3%) 대비 84.8%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